

제1과목 : 노동법(1)

1. 부당해고등 구제제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할 때에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④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2. 임금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②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말한다.
- ③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⑤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3.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②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는 없다.
- ③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손해배상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근로기준법령상 해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 ③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는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사용자의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⑤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다음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령 규정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① ㄱ: 30일 ㄴ: 15일 ② ㄱ: 30일 ㄴ: 30일 ③ ㄱ: 50일 ㄴ: 20일
- ④ ㄱ: 50일 ㄴ: 30일 ⑤ ㄱ: 60일 ㄴ: 15일

6.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③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 ④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⑤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7. 사용증명서와 근로자 명부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 ②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③ 주소는 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이다.
- ④ 사용기간이 5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8. 취업규칙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어서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9.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제138호)
- ② 석면사용 안전에 관한 협약(제162호)
- ③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철폐에 관한 협약(제182호)
- ④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 ⑤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제105호)

10. 헌법 제32조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최저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④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11.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②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
- ④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중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2.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 ㄴ.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ㄷ. 근로기준법 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 ㄹ.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ㅁ. 근로기준법 제72조 (깁내근로의 금지)

- ① $\neg, \vdash$ ② $\neg, \supset$ ③ $\neg, \neg, \square$
④ $\neg, \neg, \vdash, \square$ ⑤ $\neg, \vdash, \supset, \square$

13.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② 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
- ③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 ④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통상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4. 임신부의 보호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신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임신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주는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④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15. 소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②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 ④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 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16. 산업안전보건법상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시간, 1주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ㄱ: 5 ㄴ: 30 ② ㄱ: 5 ㄴ: 32 ③ ㄱ: 6 ㄴ: 30
 ④ ㄱ: 6 ㄴ: 32 ⑤ ㄱ: 6 ㄴ: 34

17.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도 포함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④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

18.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④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된다.

1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③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 ⑤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④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2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22.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 ①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 ② 김장수당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 ③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④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을 가지는 급식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 ⑤ 단체협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임금 또는 수당

23. 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사무집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②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 ③ 채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있으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다.
- ④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채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채당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2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5. 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동조합 및 근로자는 근로의욕 증진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근로복지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관계 당사자 간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우대하는 저축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보조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2과 목 : 노 동 법 (2)

26.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에 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ㄴ.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ㄷ.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7. 우리나라 노동법의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은 1953년에 제정되었다.
- ②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최초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구제주의와 처벌주의를 병행하고 있다.
- ③ 미국의 와그너법을 수용하여 사용자와 노동조합을 부당노동행위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 ④ 필수유지업무협정 제도는 201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시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 ⑤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는 1980년 노동조합법 개정 시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없다.
- ②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지역별 노동조합이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를 구성원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경우에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 ⑤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 대표자 및 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⑤ 규약의 변경에 관한 총회의 의결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단체교섭의 노동조합측 당사자는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이다.
 - ②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 ③ 사용자는 쟁의기간 중이라는 사정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 ④ 노동조합은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⑤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해당 교섭단위 내의 비조합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 ②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사용자는 개별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 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할 때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연합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3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결정 및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 ②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③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도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3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한다.
- ②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③ 단위노동조합이 상부단체인 연합단체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는 단체교섭권한이 없다.
- ④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고 하여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바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는 무효이다.
-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협상에 따라 정리해고를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단체협약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③ 단체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있을 경우에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인사나 징계에 대해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조합원에 대한 인사나 징계처분을 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⑤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고,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

3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체협약에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부분은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 ⑤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3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 중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조합비 공제 ② 소정근로시간 ③ 단체교섭의 절차
- ④ 노동조합 전임자의 수 ⑤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37. 단체협약의 내용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벌금에 처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 ① 재해부조 ② 편의제공 ③ 휴게시간
- ④ 교섭창구 단일화 ⑤ 근무시간중 회의참석

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긴급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긴급조정 결정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 ②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포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 ③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3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쟁의의 조정(調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적 조정 등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없다.
- ② 사적 조정 등에 의하여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③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④ 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 전이라도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교섭을 주선하는 등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관계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4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 ③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 ④ 작업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 ⑤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 ② 단체협약이 새로 체결된 직후부터 뚜렷한 무효사유를 내세우지도 아니한 채 단체협약의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평화의무에 위반되는 쟁의행위를 행하는 것은 이미 노동조합활동으로서의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다.
- ③ 임금인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해 오던 휴일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여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더라도 이는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노동조합이나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 이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 개인이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다.
- ⑤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

4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이전이라도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 ②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때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
- ④ 근로자들의 직장점거가 개시 당시 적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여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 ⑤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단체협약의 내용중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노동조합은 규약에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단순히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다소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였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결과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저해되었다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것만으로 정당성이 결여된다.
- ④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⑤ 하나의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확정에 관한 내용이다.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① 15 ② 20 ③ 30 ④ 50 ⑤ 60

4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②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심문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 ④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심문을 할 때에 증인의 출석과 질문은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하며 그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 ⑤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4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은 효력규정인 강행법규이므로 이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사법상으로도 그 효력이 없다.
 - ②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 ③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은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지지 않는다.
 -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배치전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 ⑤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4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한다.
 - 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④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
 - ⑤ 노사협의회가 의결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어느 일방의 신청으로 중재를 행한다.

4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립학교 교원은 각 학교 단위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 ③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 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4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 ②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정부교섭대표는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 ④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⑤ 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 당사자 양쪽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재를 한다.

50.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調整)사건을 관장한다.
- ② 노동위원회는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 ③ 노동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④ 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에 관여한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었거나 직원이었던 변호사·공인노무사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사건에 관한 직무를 하면 아니 된다.

제3과목 : 민법

51.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비법인사단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 ④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이사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 ⑤ 후임이사가 유효하게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있다면, 그 다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구(舊) 이사만이 직무수행권을 가진다.

52.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없다.
- ②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본인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의 기간을 정해야 한다.
- ④ 특정후견개시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본인은 가정법원에 특정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 종전의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할 필요는 없다.

53.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원총회는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의 필수기관이다.
- ②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사원총회는 소집통지에 의해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으나, 총회의 결의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사원총회를 소집하려고 하는 경우,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가 도달해야 한다.
- ⑤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사원의 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없다.

54.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 ② 주물 소유자의 소유가 아닌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③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 ④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⑤ 어떤 권리를 다른 권리에 대하여 종된 권리라고 할 수 있으려면 종물과 마찬가지로 다른 권리의 경제적 효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55.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 경비원이 집배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한 후 이를 아파트 공동 출입구의 우편함에 넣어 두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취인이 그 우편물을 수취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 ㄴ.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 ㄷ.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 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말한다.
- ㄹ.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서 제출 당시 권한 대행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 권한 대행자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56.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 ② 제3자의 사기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 ④ 사기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의 포괄승계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⑤ 상품의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7.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 ② 표현대리의 성립을 위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야 한다.
- ③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 ④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8.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고 묵시적으로는 할 수 없다.
- ②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 상대방에 의하여 유효하게 해제된 경우, 대리인이 수령한 상대방의 급부를 본인이 현실적으로 인도받지 못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 ③ 부동산의 이중매매의 경우,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거래의 사정을 잘 알면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면,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④ 대리인의 대리권은 복대리인의 선임에 의해 소멸한다.
- ⑤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59.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무효인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면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토지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③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 ④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⑤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60.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 ②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 ③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불법조건만 무효이며, 법률행위 자체는 무효로 되지 않는다.
- ④ 기한의 효력은 기한 도래시부터 생기며 당사자가 특약을 하더라도 소급효가 없다.
- ⑤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61.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불확정기한부 권리는 채권자가 기한 도래 사실을 안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②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③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④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62. 1997년 6월 3일(화) 오후 2시에 태어난 사람이 성년이 되는 시기는?

- ① 2016년 6월 3일(금) 0시 ② 2016년 6월 4일(토) 0시
③ 2017년 6월 3일(토) 0시 ④ 2017년 6월 4일(일) 0시
⑤ 2017년 6월 6일(화) 0시

63. 불가분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권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A의 소유 건물을 B와 C가 공동으로 매수하는 경우, B와 C의 건물인도청구권
- ② A의 소유 건물을 B와 C가 공동으로 매수하는 경우, A의 매매대금청구권
- ③ A와 B가 공유하는 건물을 C에게 매도하는 경우, A와 B의 매매대금청구권
- ④ A와 B가 공유하는 건물을 C에게 매도하는 경우, C의 건물인도청구권
- ⑤ A와 B가 공유하는 토지를 C가 불법으로 점유한 경우, A와 B의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64.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채권자대위권은 절차법상의 권리이다.
- ② 채권자대위권으로 보전되는 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 ③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계속된 이후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개개의 소송상 행위도 채권자대위가 허용된다.
- ④ 채무자가 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도, 채무자는 대위 행사되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으며 이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⑤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65. A, B, C, D(부담부분은 균등)는 E에 대하여 1,2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E는 A에 대하여 연대의 면제를 하였다. 그 후 B는 무자력이 되었다. A, C, D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A는 100만원, C는 300만원, D는 300만원
- ② A는 300만원, C는 300만원, D는 300만원
- ③ A는 300만원, C는 400만원, D는 400만원
- ④ A는 350만원, C는 350만원, D는 350만원
- ⑤ A는 400만원, C는 400만원, D는 400만원

66.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채권자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③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은 압류가 금지된다.
- ④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양도 통지 증서의 확정일자 선후로 결정한다.
- ⑤ 채권양도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로서, 양도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67.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수동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인 경우
- ② 자동채권에 조건 미성취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경우
- ③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 ④ 수동채권이 압류금지 채권인 경우
- ⑤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이행지가 다른 경우

68.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는 특정인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 ② 승낙자가 청약에 변경을 가하지 않고 조건만을 붙여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다.
- ③ 청약자는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 ④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 ⑤ 승낙의 기간을 정한 청약은 승낙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69. 해제와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②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며 묵시적인 합의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하여도 다른 당사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의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에도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은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기 때문에 이미 이행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70.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종전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아래 임대인으로부터 새로 목적물을 임차한 사람에게 그 목적물을 직접 이전해 준 경우, 임대인은 종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 청구에 대하여 목적물 반환과 동시에 이행할 것을 항변하지 못한다.
- ② 지명채권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할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의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상계가 허용된다.
- ④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상대방의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⑤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었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아 수령지체에 빠진 자는 그 후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다시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71.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 ② 해약금에 의하여 해제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계약금이 해약금과 손해배상의 예정을 겸하는 경우, 그것이 부당히 과다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 ④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다.
- ⑤ 계약금의 수령자는 배액을 제공하고 해제할 수 있으며, 제공된 금액을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할 의무를 부담한다.

72.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고 임대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토지임대차의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 ④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행위가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라도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 ⑤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사이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73.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경우, 수증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② 증여자의 손자에 대하여 수증자가 범죄행위를 한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 ③ 부담부증여의 수증자가 그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으나 이미 이행한 부분은 수증자에게 반환받지 못한다.
- ④ 증여의 목적인 물건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알면서 이를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증여자는 그에 대한 담보책임을 진다.
- ⑤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74. 여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여행주최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여행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당사자의 약정 및 관습이 없는 경우, 여행자는 여행종료 후에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여행계약이 중대한 하자로 해지된 경우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하지만, 여행자가 이미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 ⑤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여행주최자가 여행계약을 해지한 경우, 여행주최자는 귀환운송의 의무를 지며 계약해지로 발생한 추가 비용은 여행자가 전액 부담한다.

75. 부당이득의 반환의무 또는 책임의 범위가 현존이익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선의의 부당이득자의 반환의무
- ②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선의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반환의무
- ③ 법률행위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 제한능력자의 상환의무
- ④ 수탁보증인이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채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주채무자의 수탁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
- ⑤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 관리자가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경우, 본인의 관리자에 대한 무과실손해보상채무

제4과목 : 사회보험법

76.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정의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 (), () (을)를 말한다.

- ①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안전망
- ②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안전망
- ③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 ④ 사회서비스, 사회안전망, 사회보험
- ⑤ 보편적 복지,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77.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다.
- ② 대통령이 위촉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어떤 경우에도 해촉될 수 없다.
-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사무국을 둔다.

78. 고용보험법령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배우자의 질병·부상 등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① 10일 ② 15일 ③ 30일 ④ 2개월 ⑤ 3개월

79. 사회보장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80.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실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과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④ 수급자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거나 정정한 경우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81. 고용보험법령상 실업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지정된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 ① 50만원 ② 100만원 ③ 150만원 ④ 200만원 ⑤ 300만원

82. 고용보험법상 연장급여의 상호 조정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그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ㄷ.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8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산정한 결과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은 얼마인가?

- ①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최저임금액
 ③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④ 통상임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⑤ 통상임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84. 고용보험법상 피보험기간이 2년일 경우 이직일 현재 연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가 옳은 것은?

- ① 25세 장애인: 150일 ② 28세 비장애인: 120일 ③ 35세 비장애인: 150일
 ④ 40세 비장애인: 150일 ⑤ 55세 장애인: 180일

85. 고용보험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 ①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부정수급 조사를 위하여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함에도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③ 심사의 청구를 받아 하는 고용보험심사관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④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확인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
 ⑤ 사업주가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업재활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훈련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에서 실시하게 한다.
- ②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직장적응훈련비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 ④ 재활운동비는 장애급여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 ⑤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질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② 업무수행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③ 업무수행 과정에서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후각신경마비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④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객의 폭언 등과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생긴 우울병 에피소드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 ⑤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88.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애등급의 재판정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장애등급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년 이 지난 날부터 (㉡)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① ㉠: 1, ㉡: 1
- ② ㉠: 1, ㉡: 2
- ③ ㉠: 2, ㉡: 1
- ④ ㉠: 2, ㉡: 2
- ⑤ ㉠: 3, ㉡: 2

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장의비를 지급한다. 이 때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몇 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가?

- ① 60일
- ② 90일
- ③ 120일
- ④ 150일
- ⑤ 180일

90.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사고가 아닌 것은?

- ①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②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③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④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⑤ 출장 중에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

91.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장애등급 2등급인 자녀가 19세가 된 때
 ㄴ.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ㄷ.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게 된 때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92.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부담 및 납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부담한다.
 ②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⑤ 공무원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액의 전액을 부담한다.

93.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입기간이 (ㄱ)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 중에 생긴 질병으로 가입 중의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부터 (ㄴ)년 이내에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① ㄱ: 10, ㄴ: 2 ② ㄱ: 10, ㄴ: 3 ③ ㄱ: 20, ㄴ: 2
 ④ ㄱ: 20, ㄴ: 3 ⑤ ㄱ: 30, ㄴ: 2

94.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③ 고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④ 중대한 과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구하는 문서나 물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⑤ 업무로 생긴 질병으로 인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 경우

9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총액 등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성명 등을 그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1월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종료일 등을 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9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용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세 이후에 고용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현재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이다.

- ① ㄱ: 55, ㄴ: 13 ② ㄱ: 60, ㄴ: 13 ③ ㄱ: 60, ㄴ: 25
- ④ ㄱ: 65, ㄴ: 13 ⑤ ㄱ: 65, ㄴ: 25

9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가입을 승인하려면 직업안정법에 따른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이 아니어야 한다.
- ②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의 승인을 받은 경우 파견예정자의 보험관계 성립일은 출국한 날의 다음 날이다.
- ③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은 피보험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 ④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데,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25이다.
- ⑤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급할 금품에서 원천공제할 수 없다.

9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 ③ 고용보험법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9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산재보험료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산재보험료율(100%) = [산재보험급여지급률 + 추가지출률](㉠)% + 부가보험료율 (㉡)%

- ① ㉠: 70, ㉡: 30
- ② ㉠: 75, ㉡: 25
- ③ ㉠: 80, ㉡: 20
- ④ ㉠: 85, ㉡: 15
- ⑤ ㉠: 90, ㉡: 10

10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의 총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수 없다.
- ③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등의 공개가 결정된 자에 대하여 공개대상자임을 알림으로써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고용·산재정보통신망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 5과목 : 경제학원론

101. A 기업은 완전경쟁시장에서, B 기업은 순수독점시장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두 기업의 총수입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두 기업 모두 총수입곡선이 처음에는 상승하다 나중에는 하락한다.
 - ② 두 기업 모두 총수입곡선이 음(-)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다.
 - ③ A 기업의 총수입곡선은 수평선의 형태이나, B 기업의 총수입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갖는다.
 - ④ A 기업의 총수입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고, B 기업의 총수입곡선은 처음에는 상승하다 나중에는 하락한다.
 - ⑤ A 기업의 총수입곡선은 처음에는 상승하다 나중에는 하락하고, B 기업의 총수입곡선은 수평선의 형태이다.
102. 독점기업의 수요곡선은 $P = -Q + 12$ 이고, 한계비용은 4 이다.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한계비용이 1만큼 감소하는 경우,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의 변화는? (단, P 는 가격, Q 는 수량, $P > 0$, $Q > 0$ 이다.)
- ① 0.5 증가 ② 0.5 감소 ③ 1.0 증가 ④ 1.0 감소 ⑤ 변화 없음
103. 지니계수(Gini coeffici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니계수가 같으면 소득계층별 소득분포가 같음을 의미한다.
 - ② 완전히 평등한 소득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45도 대각선과 로렌츠곡선(Lorenz curve)이 일치한다면, 지니계수는 1이다.
 - ③ 완전히 평등한 소득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45도 대각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이 클수록, 지니계수는 커진다.
 - ④ 지니계수는 완전히 평등한 소득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45도 대각선의 길이를 로렌츠곡선의 길이로 나눈 값이다.
 - ⑤ 지니계수는 빈곤층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수준을 의미한다.
104. 소비자 A의 효용함수는 $U = X \cdot Y$ 이고, X재, Y재 가격은 모두 10 이며, A의 소득은 200 이다. 소비자 A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X재, Y재의 소비조합은? (단, $X > 0$, $Y > 0$ 이다.)
- ① 8, 12 ② 9, 11 ③ 10, 10 ④ 10, 20 ⑤ 20, 10

105.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 가격이 하락하면 총수입은 증가한다.
-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아질수록, 물품세 부과로 인한 경제적 손실(deadweight loss)은 커진다.
- ③ 소비자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품일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작아진다.
- ④ 직선인 수요곡선 상에서 수요량이 많아질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작아진다.
- ⑤ 좋은 대체재가 많을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작아진다.

106. 2국 2재화의 경제에서,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비교우위를 갖는 상품을 생산하여 교역을 한다. 한국은 쌀 1섬을 얻기 위해 옷 1벌의 대가를 치러야 하고, 말레이시아는 옷 1벌을 얻기 위해 쌀 2섬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한국이 쌀 생산에 특화하여 수출하는 경우, 양국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다.
- ② 한국이 옷을 수출하면서 옷 1벌에 대해 쌀 2섬 이상을 요구하면, 말레이시아는 스스로 옷을 생산하기로 결정할 것이다.
- ③ 쌀 1섬의 국제가격이 옷 1/2 벌보다 더 낮아야 교역이 이루어진다.
- ④ 말레이시아가 옷과 쌀 모두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 양국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다.
- ⑤ 두 나라 사이에 교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쌀 1섬의 국제가격이 옷 1벌보다 더 높아야 한다.

107. 단기에 A기업은 완전경쟁시장에서 손실을 보고 있지만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 시장수요의 증가로 시장가격이 상승하였는데도 단기에 A기업은 여전히 손실을 보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A기업의 한계비용곡선은 아래로 평행 이동한다.
- ② A기업의 한계수입곡선은 여전히 평균비용곡선 아래에 있다.
- ③ A기업의 평균비용은 시장가격보다 낮다.
- ④ A기업의 총수입은 총가변비용보다 적다.
- ⑤ A기업의 평균가변비용곡선의 최저점은 시장가격보다 높다.

108. 휴대폰의 수요곡선은 $Q = -2P + 100$ 이고, 공급곡선은 $Q = 3P - 20$ 이다. 정부가 휴대폰 1대당 10의 종량세 형태의 물품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하였다면, 휴대폰 공급자가 부담하는 총 조세부담액은? (단, P 는 가격, Q 는 수량, $P > 0$, $Q > 0$ 이다.)

- ① 120 ② 160 ③ 180 ④ 200 ⑤ 220

109. A기업은 노동시장에서 수요독점자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A기업은 생산물시장에서 가격수용자이다.)

- ① 균형에서 임금은 한계요소비용(marginal factor cost)보다 낮다.
- ② 균형에서 노동의 한계생산가치(VMP_L)와 한계요소비용이 같다.
- ③ 한계요소비용곡선은 노동공급곡선의 아래쪽에 위치한다.
- ④ 균형에서 완전경쟁인 노동시장에 비해 노동의 고용량이 더 적어진다.
- ⑤ 균형에서 완전경쟁인 노동시장에 비해 노동의 가격이 더 낮아진다.

110. 독점적 경쟁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업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이다.
- ②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단기에는 기업이 양(+)의 이윤을 얻지 못한다.
- ③ 기업의 이윤극대화 가격은 한계비용보다 크다.
- ④ 단기에 기업의 한계수입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결정된다.
- ⑤ 장기에 기업의 수요곡선과 평균비용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결정된다.

111. 인플레이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은 총수요의 증가가 인플레이션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경우이다.
- ② 정부가 화폐공급량 증가를 통해 얻게 되는 추가적인 재정수입을 화폐발행이득(seigniorage)이라고 한다.
- ③ 물가상승과 불황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 ④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은 채권자에게서 채무자에게로 소득재분배를 야기한다.
- ⑤ 예상한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메뉴비용(menu cost)이 발생하지 않는다.

112. 통화정책의 단기적 효과를 높이는 요인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높은 경우
- ㄴ.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높은 경우
- ㄷ.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경우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13. 국제수지표 상 경상계정(current accounts)에 속하지 않은 항목은?

- ① 정부 사이의 무상원조
- ② 해외교포로부터의 증여성 송금
- ③ 해외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등의 투자 소득
- ④ 내국인의 해외여행 경비
- ⑤ 내국인의 해외주식 및 채권 투자

114.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확대되면,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가 ()한다. 이렇게 되면 실질이자율이 ()하고 저축이 늘어난다. 그 결과, 대부자금의 균형거래량은 ()한다. (단, 실질이자율에 대하여 대부자금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대부자금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 ① 증가, 상승, 증가 ② 증가, 하락, 증가 ③ 증가, 상승, 감소
- ④ 감소, 하락, 증가 ⑤ 감소, 하락, 감소

115. A국의 2014년 명목 GDP는 100억원이었고, 2015년 명목 GDP는 150억원이었다. 기준년도인 2014년 GDP 디플레이터가 100이고, 2015년 GDP 디플레이터는 120인 경우, 2015년의 전년대비 실질 GDP 증가율은?

- ① 10% ② 15% ③ 20% ④ 25% ⑤ 30%

116. 장기 총공급곡선의 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연실업률이 증가하면, 왼쪽으로 이동한다.
- ② 인적자본이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 ③ 생산을 증가시키는 자원이 발견되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 ④ 기술지식이 진보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 ⑤ 예상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왼쪽으로 이동한다.

117. 법정지불준비율이 0.2이고, 은행시스템 전체의 지불준비금은 300만원이다. 은행시스템 전체로 볼 때 요구불예금의 크기는? (단, 초과지불준비금은 없고, 현금통화비율은 0이다.)

- ① 1,000만원 ② 1,200만원 ③ 1,500만원 ④ 2,000만원 ⑤ 2,500만원

118. 통화공급이 감소하고 정부지출이 증가하는 경우, IS-LM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물가가 고정된 폐쇄경제이고, IS 곡선은 우하향, LM 곡선은 우상향한다.)

- ① 이자율은 불변이고, 소득은 감소한다.
- ② 이자율은 상승하고, 소득은 증가한다.
- ③ 이자율은 하락하고, 소득은 감소한다.
- ④ 이자율은 하락하고, 소득은 증가한다.
- ⑤ 이자율은 상승하고, 소득의 증감은 불확실하다.

119.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단기보다 장기에서 더 크다.
- ②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총생산비 중 노동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③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생산요소로의 대체가능성이 클수록 동일한 임금 상승에 대하여 고용감소는 적어진다.
- ④ 노동수요는 노동을 생산요소로 사용하는 최종생산물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영향을 받는다.
- ⑤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노동수요량의 변화율을 임금변화율로 나눈 것이다.

120. 주어진 물가수준에서,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원인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개별소득세 인하
- ㄴ. 장래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 ㄷ. 통화량 감소에 따른 이자율 상승
- ㄹ. 해외경기 침체에 따른 순수출의 감소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21. 경제활동참가율이 60%이고 실업률이 10%일 때, 고용률은?

- ① 45% ② 54% ③ 66% ④ 75% ⑤ 83%

122.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시간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임금이 상승했을 때 노동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여가는 정상재이다.)

- ㄱ.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량이 감소한다.
 ㄴ. 임금의 상승은 여가의 기회비용을 상대적으로 높인다.
 ㄷ. 대체효과는 여가의 소비를 줄이고 노동공급량을 증가시킨다.
 ㄹ. 소득효과는 여가의 소비를 늘리고 노동공급량을 감소시킨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23. 효율임금이론(efficiency wage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근로자의 생산성이 임금수준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에 입각해 임금의 하방 경직성을 설명하고 있다.
 ㄴ. 높은 임금은 근로자들의 태만을 막아주는 기능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ㄷ. 기업이 제공하는 임금이 낮아지면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은 임금을 낮추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ㄹ.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여도 임금이 하락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24. A근로자의 연봉이 올해 1,500만원에서 1,650만원으로 150만원 인상되었다. 이 기간에 인플레이션율이 12%일 때, A근로자의 임금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2% 명목임금 증가 ② 2% 명목임금 감소 ③ 2% 실질임금 증가
 ④ 2% 실질임금 감소 ⑤ 15% 명목임금 증가

125. 우리나라의 실업통계에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경우는?

- ① 취업자가 퇴직하여 전업주부가 되는 경우
 ② 취업을 알아보던 해직자가 구직을 단념하는 경우
 ③ 직장인이 교통사고를 당해 2주간 휴가 중인 경우
 ④ 대학생이 군 복무 후 복학한 경우
 ⑤ 공부만 하던 대학생이 편의점에서 주당 10시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경우

